
정책참고자료

2016-14호



목 차



1 국민안전처

재난신고-정보-통신 연계로 재난현장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쉬워진다	8
-------------------	---

3 기획재정부

일자리 사업 15.8조원 전면개편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10
--	----

4 교육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공식 출범	13
--------------------------	----

5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 콘텐츠의 전시·상용화 지원을 통한 가상현실(VR) 등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15
--	----

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지수,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서울 성동구가 최고 -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발표 -	19
---	----

전국 방방곡곡 문화정보, 지역문화피디가 전합니다	32
----------------------------	----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식품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장선다	35
-----------------------------	----

지난 3년간 농식품 핵심규제개혁 성과 및 하반기 계획발표	38
---------------------------------	----

8 환경부

폐자원 활용부터 악취제거까지 ... 정부3.0 환경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53
---	----

9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유통·판매 경쟁력으로 파워UP한다	59
----------------------------	----

10 여성가족부

전국 지역다문화프로그램 6월부터 본격 운영	60
-------------------------	----

11 국토교통부

원주시 우산동 방치된 공동주택, 공포의 타워크레인 소음과 위험에서 벗어난다	70
--	----

12 해양수산부

첨단 과학기술로 해양수산 신산업 본격 육성한다	72
---------------------------	----

재난신고·정보·통신' 연계로 재난현장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 '16~'18년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개선 추진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신고발생부터 초기대응까지의 모든 재난현장 상황을 통합 지휘하는데 필요한 3대 정보통신 인프라*간 연계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재구축한다고 밝혔다.

* 신고체계 ↔ 정보체계 ↔ 통신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2조(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관리체계)

- 기존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3대 정보통신 인프라 간 통합·연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재난현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신고체계(긴급신고전화통합), ▲정보체계(통합재난 안전정보시스템) ▲통신체계(재난안전통신망)가 '17년말까지 구축됨에 따라,

- 그 동안 3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통합·연계시키는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기술적·행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 이에 국민안전처는 3대 정보통신 인프라 간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6~'18년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신고자, 상황실, 재난현장 대원 간에 정보를 전달·공유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정보공유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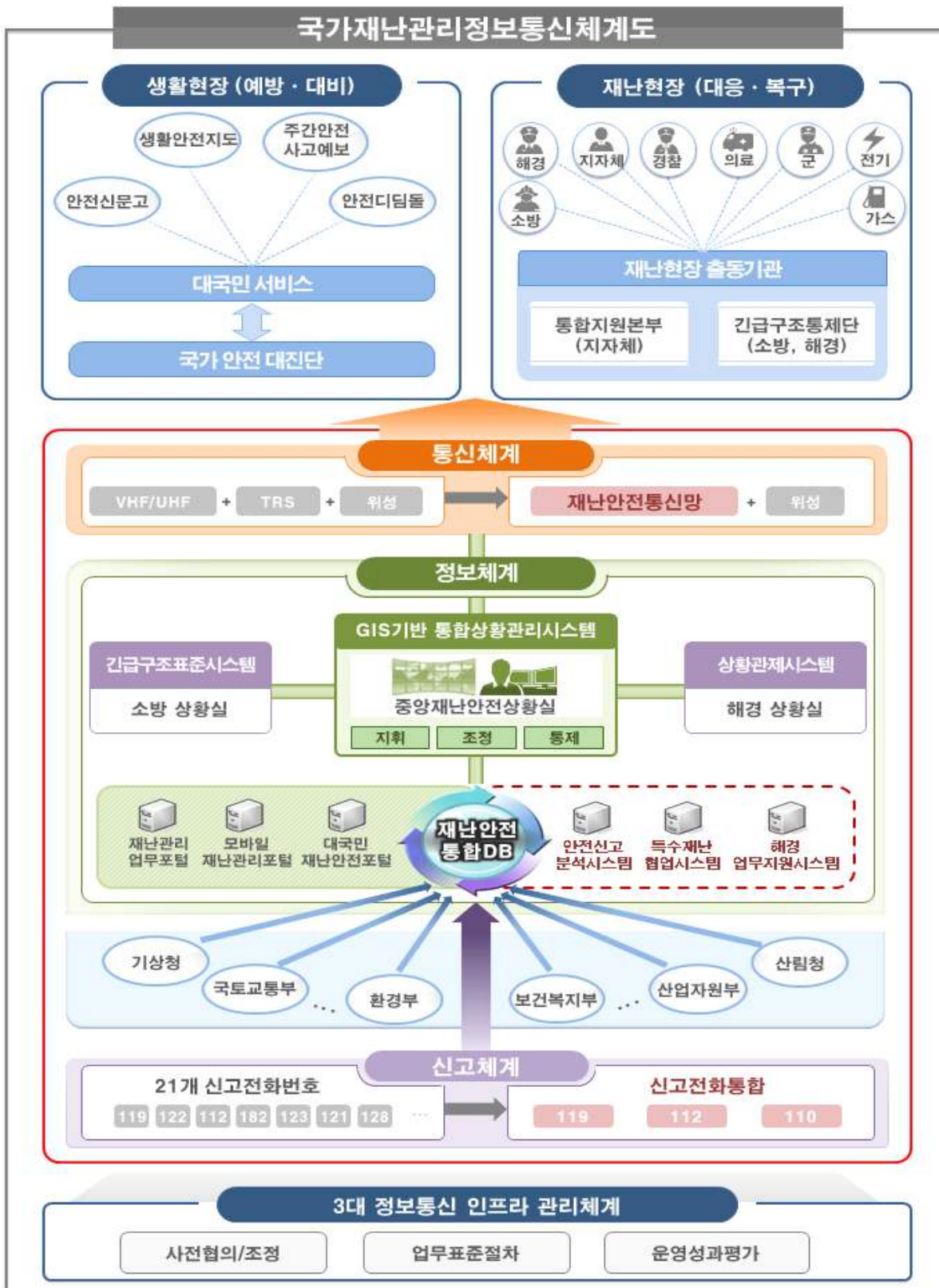
* 상황실에 설치된 지령시스템을 활용하여 긴급신고전화를 사용하는 일반 신고자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재난현장 출동대원 간에 통화로 설정

- 또한, 안전·특수·해양 분야를 보완한 GIS기반의 통합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3대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연계와 공동이용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이러한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18년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총 429억원을 투자, 8대 분야 17개 과제*를 수행한다.

* 안전신고·정보분석체계 구축, 해양경비안전 통합관제시스템 기능개선, 재난안전 통신망용 “앱” 스토어 개발, 정보통신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정 등

- 김동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은 '18년까지 3대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의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완성되면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의 상황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2
8대 분야 17개 세부과제

구 분	세부 핵심과제	추진시기
재난안전통신망과 긴급신고전화 간 연계체계 구축	연동장치(재난안전통신망↔긴급신고전화) 개발	'18년
안전사고 예방 활동 기능 강화	안전신고 · 정보분석체계 구축	'16년 ~ '18년
	주간안전사고 예보시스템 구축	'17년 ~ '18년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생활안전지도 기능 개선	'16년 ~ '18년
특수재난 협업대응 체계구축	재난사고정보 통합 수집 · 분석체계 구축	'16년 ~ '18년
해양사고 및 방제 대응역량 강화	해양경비안전 통합관제시스템 기능개선	'17년 ~ '18년
	해양경비안전 현장지휘보고체계 구축	'16년 ~ '18년
	해양오염방제시스템 기능개선	'17년
	해양경비안전장비 통합관리체계 구축	'17년 ~ '18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IT신기술 도입 추진	재난안전 빅데이터 공동 활용체계 구축	'18년
	IoT기반의 통합 분석 · 감시 플랫폼 개발	'17년 ~ '18년
	주요 지하철 역사 대상 비콘 시범사업 추진	'18년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강화	가상훈련 교육시스템 시범구축	'18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유 전달체계 확립	재난안전 “앱” 스토어 개발	'17년 ~ '18년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체계 개선	정보통신사업 사전협의 관리체계 마련	'16년
	정보통신사업 표준 업무절차 마련	'16년
	정보통신사업 운영성과 관리체계 구축	'16년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쉬워진다

권익위, 이의신청 방법 인터넷 등 다양화 권고...경찰청
7월 말까지 개선키로

-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에 앞서 정 모 씨는 지난 5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고 이의신청 방법을 물었더니 10일 이내 근무시간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직장인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의신청 방법을 다양화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차모 씨도 같은 달 “교차로를 통행하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하려면 일과 중에 직접 경찰서에 가서 해야 하니 전산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청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교통경찰관이 직접 그 위반 현장에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지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통해 이의신청 인용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 9,875건에 이르며, 이는 2013, 2014년도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2,914건, 2014년 2,005건 등 많지 않은 실정이다.

<범칙금 부과 및 이의신청 현황(처리건수 기준, 단위: 건수)>

연도	범칙금 부과	이의 신청	이의신청사건 법원 인용건수
2013	2,885,126	1,546	53
2014	3,666,196	2,005	85
2015	4,979,875	2,914	101

-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발달되어 있어 대부분의 민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찰에도 같은 수준의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사업 15.8조원 전면개편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경쟁력 상실 사업장, 직접일자리 지원을 축소하고 근로자 역량 강화, 취약계층 고용 촉진, 정보시스템 선진화 부문은 강화

◆ 10% 수준(1.6조원 내외)의 일자리사업 재편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

□ 6.28(화)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연석회의가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함

- 정부 일자리사업은 '기업 지원, 묵은 일자리 보호'에서 구직자·전직희망자의 역량개발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사람 지원' 원칙으로 재편하는 한편,
-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사업 개편을 통해 시장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됨

* 정부 일자리사업 : 25개 부처(청), 196개 사업('16년 예산 15.8조원)

□ 논의된 주요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고용장려금 중 실효성이 미미한 사업장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은 축소하되,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

지원과 EITC(근로장려금) 지속 확대

- 다수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자 중심의 통합서비스인 창업 성공 패키지와 재기지원패키지로 재편해 창업위험 감소
- 직접일자리 비중은 경기상황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축소
- 시간선택제와 일·가정 양립(대체인력 지원 등) 지원 확대

② 고용센터는 일부센터 민간위탁(기업대상업무 제외), 책임경영 등 조직 혁신

- 공공과 민간의 경쟁 도입, 센터장 민간 공모 등 성과중심 운영

③ 직업훈련은 재량적 규제와 가격·물량 통제를 축소하고 엄격한 성과관리

-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직업훈련사업은 취업률 등 표준 핵심성과지표로 통합관리

④ IT강국에 걸맞는 일자리 정보시스템과 통합 게이트웨이 구축

- '워크넷'을 공공 정보망 대표 브랜드로 하여, 부처별 고용·훈련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 전달체계는 One-site, One-stop 원칙 하에 최초 창구 일원화

⑤ 일자리 사업 관리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

- 각 부처의 유사·중복된 일자리사업 통폐합
- 사업의 성과, 중복여부를 주기적 조사하고 존속여부 결정

□ 심층평가를 통해 재편되는 일자리사업 재원은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10%수준(1.6조원 내외)으로

- 이번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하여 7월 중 심층평가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하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및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

* 정보시스템 연계 등 별도 절차가 불필요한 사업은 바로 조치

-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는 지난 2월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사업의 전면 검토를 통해 사업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

-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직접 검토에 참여하여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을 마련하였으며 대상별 매트릭스 분석 및 수요자 설문조사 등 심층 분석이 실시되었음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25개 일자리 관계부처는 T/F를 구성하여 개편방향 논의, 평가자료 제공 등 심층평가를 적극 지원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공식 출범

- 프라임사업협의회, 성과창출을 위한 협력의 의지 다져 -

-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이 오늘 원광대에서 개최된 출범식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 프라임 사업은 미래 유망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선도모델을 지원하여 인력 미스매치 양적 조정 및 학생의 전공과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난 5월 3일, 대형 9개교, 소형 12개교 등 전국 21개교 대학을 프라임 대학으로 선정·발표하였다.
 -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운영(5.31 ~ 6.24) 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프라임 사업 협의회 회장교인 건국대학교 송희영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프라임 사업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 혁신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 “21개 프라임 대학들은 다른 어떤 대학들보다 앞서서 대학 교육의 혁신 모델을 창출하여 대학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사명이며, 프라임 대학 모두가 각오를 다져 합심과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로 약속하였다.
 - 또한,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를 국가 발전을 위한 기회로 변화시키는데 프라임 사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프라임 사업이 개별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인재의 역량을 키우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비전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 프라임 사업 대학으로 선정되기까지 대학 구성원 전체의 어려운 협의 과정이 있었던 만큼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정신으로 굳건하고 꾸준하게 진척시켜주길 부탁하였다.
-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프라임 사업 협의회는 대학 간 사업 추진현황과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 앞으로 정부도 21개 프라임 사업 선정대학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해 융·복합적인 문제를 도전적이고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특히,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여 사업 내실화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들과 함께 맞춤형 진로와 창업, 취업 컨설팅 지원에도 힘쓸 것이다.

중소기업 콘텐츠의 전시·상용화 지원을 통한 가상현실(VR) 등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내 디지털파빌리온을 중소기업의
전시·체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테스트 베드 등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감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위한 ‘유망 실감콘텐츠 고도화 지원 사업’ 6개 과제(총 규모 9억 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실감콘텐츠란 컴퓨터그래픽(CG),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홀로그램, UWV*(Ultra Wide Vision) 등 차세대 ICT 기술로 구현되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참여형 차세대 콘텐츠이다.

* 기존의 디지털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화각(디지털방송 16:9, 디지털 시네마 2.35:1 등)을 넘어 인간의 시야각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대화각 영상을 제공하여 현장감 극대화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상

○ 정부는 실감콘텐츠를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15.4월)한 이후, 관련 인력양성, 기술개발(R&D), 제작 지원 사업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번 사업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 그간 우리 중소기업은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상품화하는 데 필요한 전시 및 체험 공간, 테스트 베드, 제작 장비 등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에 미래부는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 디지털파빌리온을 우리 기업이 개발하는 실감콘텐츠를 연구하고 전시·테스트하여 고도화·상용화 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러한 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콘텐츠를 선정하여 실감콘텐츠로 전환하거나 개발 중인 실감콘텐츠를 고도화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6개 과제는 ▲가상현실(VR) 체험형 과제 4개와 ▲실감영상 분야에서 홀로그램, 초고품질 UWV(Ultra Wide Vision) 등 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가상현실(VR) 분야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스키, 비행 조정, 자동차 경주, 탐험 등을 주제로 하는 VR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뮬레이터, 어트랙션 등 기술과 접목하여 신 시장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감영상 분야에서는 우선 광고 산업에서 홀로그램 기술이 실감 영상을 구현하는 데 다양하게 사용되어, 옥외 광고형 홀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광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한류, 스포츠 등 분야에서는 UWV(Ultra Wide Vision) 기술을 활용한 초실감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주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6개 과제에 대해 6월 14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기업이 완성도가 높은 실감콘텐츠를 개발하여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시·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테스트 베드 지원 및 상용화 지원 등을 다할 계획이다.

□ 개 요

- 단순 ICT 전시관에서 탈피, 문화콘텐츠와 VR, AR 등 디지털기술이 콘텐츠 개발 단계에 따라 다양한 융합을 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구축

* 콘텐츠 연구·기획(3층)→테스트·고도화(2층)→전시·체험 및 상용화(1층) 등 교육과 비즈니스가 연계된 복합 공간

< 디지털파빌리온 공간 정비 계획(안) >

	현 재		변 경	
3층	상상관	⇒	교육관	· 융합 랩, 실감영상교육센터 프로젝트 연구·기획
2층	탐구관		비즈관 (B2B)	· 유망 실감콘텐츠 개발 스튜디오 · 비즈매칭 지원, R&D 결과물 전시 고도화
1층	창조관		전시관 (B2C)	· 새로운 전시 아이템 유지 · 국내외 관람객 대상 시장 확대 전시·체험

- 정기적인 비즈매칭 데이를 개최하여 국내외 실감콘텐츠 기업 간 비즈매칭, 기술교류, 투자유치 등 지원

□ 주요 내용

- (융합 교육) 프로젝트 기반의 실감콘텐츠 제작·기획 인력 양성
 - ‘융합 랩’, ‘실감영상 교육센터’ 등 구축을 통해 프로젝트 기반의 융합형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연계 지원 체계 마련
- (고도화·상용화) 유망 실감콘텐츠 고도화를 통한 상용화 지원
 - (플래그십 프로젝트) VR테마파크, VR게임 체험 등 플래그십 주요 과제에 대한 개발 →테스트·수정 등을 통한 고도화
 - (상설전시 지원) 우수 중소 콘텐츠 기업의 프로젝트를 공모·선정하여 고도화하고 상설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
 - (R&D사업화) 정부출연연 R&D 결과물에 대한 상설 전시 및 사업화 지원
- (시장확대) 완성품의 상설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실감콘텐츠 시장 확대
 - 최근 정비(‘14.12월)한 전시 아이템의 노후화를 고려한 단계적 정비로 실감콘텐츠 산업 및 시장 확대 추진
- * ‘연구·기획→테스트·고도화’ 과정을 거친 아이템 전시를 통해 선순환 교체 주기 마련

지역문화지수,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서울 성동구가 최고

-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발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의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대행 김성진)과 함께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 설문과 자문 등을 통해 선정된 문화 정책,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 향유 등 4대 대분류 이하 총 27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적용(붙임 1 참조)하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특별·광역시와 구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세종시 등 총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지표별 자료는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통계자료와 229개 지역자치단체에 직접 의뢰하여 획득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기준연도는 2014년이다.

지역문화지수는 수집한 자료를 표준화, 가중치 부여 등 통계적으로 가공하여 추출한 값으로서, 값의 높고 낮음에 따라 문화 정책 수립·추진과 문화 자원 보전·구축·관리, 문화 활동 및 문화 향유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이며, 군 지역은 전라남도 강진군, 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붙임 2 참조)

< 지역문화지수 종합순위 전국 상위 10개 지역 >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전북 전주시	6	전남 강진군
2	경기 수원시	7	충북 청주시
3	경남 창원시	8	경북 경주시
4	경기 부천시	9	서울 성동구
5	경북 안동시	10	경기 양평군

< 지역문화지수 종합순위 시·군·구별 상위 10개 지역 >

구 분	상위 10개 지역
시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북 안동시,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전북 익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구리시
군	전남 강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전북 완주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양구군, 전북 순창군, 충북 영동군
구	서울 성동구, 부산 사상구, 서울 중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작구, 부산 서구, 서울 종로구, 서울 강동구, 부산 북구, 광주 동구

문화정책과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대분류별로 경쟁 우위 지역을 살펴본 결과, 정책은 전남 강진군, 자원은 경남 창원시, 활동은 경기 수원시, 향유는 부산 사상구가 상대적으로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문화 대분류별 지숫값이 높게 나타난 지역 >

대분류	내용	상위지역
문화정책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집행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전남 강진군, 전북 전주시, 강원 평창군, 경북 영주시, 경북 안동시
문화자원	문화유산, 문화인력, 문화자원에 대한 보유 및 관리가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기 고양시, 경북 포항시, 광주 동구
문화활동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및 활동이 활발한 지역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서울 동작구, 충북 청주시
문화향유	지역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무료 공연 및 문화이용권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	부산 사상구, 전북 완주군, 경기 구리시, 경기 양평군, 전북 무주군

2012년 기준 대비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문화 격차 완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여겨 볼 점은 2012년 기준 조사에 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 간 지역문화 격차가 다소 해소된 점이다.

수도권의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균은 0.028, 비수도권은 - 0.011로 나타나,

2012년 기준 조사 결과인 수도권 0.140, 비수도권 - 0.057에 비해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30% 지역의 지역문화지수 평균은 0.081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위 70% 지역의 - 0.041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자립도와 지역문화수준 사이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 2014년 행정자치부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역문화현황 진단 통해 지역별 지역문화진흥계획 근거로 활용

이번 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추진된 ‘지역문화실태조사’로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세종시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문화 관련 각종 통계와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과학적 방법을 통해 지역의 문화 환경 수준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지역문화진흥 정책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역의 문화적 강점을 특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역문화 지원 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대적 열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에서도 문화 역량이 뛰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문화 관련 통계와 각종 정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문화역량 및 격차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역문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지역문화실태조사 주요 지표 내용

2.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 결과(요약)

붙임 1
지역문화실태조사 주요 지표 내용

대분류	중분류	#	지표명
문화 정책	수립 및 실행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유무*
		2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수*
		3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정책 환경	4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유무*
		5	문화관련 조례 제정 유무*
	문화 예산	6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 비율
		7	천명당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 규모
문화 자원	문화유산	8	기초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수
	기반 시설	9	문화기반시설 수*
		10	생활문화시설 수
		11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유무*
		12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준수여부 및 좌석비율*
	자원 활용	13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수*
		14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15	일인당 장서수 증가율
문화 활동	활동현황	16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활동 인력	17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18	일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19	문화관광해설사 수*
		20	지역문화전문인력 수
			① 문화복지전문인력* ② 문화예술교육사*
문화 향유	지역 주민	21	천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22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23	천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규모*
		24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소외 계층	25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율
		26	천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건수*
		27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 는 지자체에서 지역문화 실태조사 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

□ 큰 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54호, 2014. 1. 28. 제정]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조사대상 :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사기간 : '15. 9. 1. ~ '16. 4. 28.(8개월)

□ 조사목적

- (현황파악) 지역문화 현황파악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 정립 및 기초 통계 자료 생산
- (수준진단) 지역별 문화수준 및 문화발전 수준 진단
- (성과평가) 표준화된 기준 지표를 활용하여 시·군 단위 지역의 문화정책 추진의 성과 및 효과 평가
- (지원기준 마련) 지역문화 발전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별 인센티브 부여 여부 판단 기준 제시, 지역별 문화부분 수급불균형 현상 극복 대안 마련
-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 전략 제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으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 조사지표 및 조사방법

- 「지역문화지표 재설정 및 DB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2014)」와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4개 분야별 27개의 지역문화지표 자료수집(붙임 1 참조)
- 기존자료 활용 및 신규조사를 통한 지역문화지표 데이터 구축
 - (기존자료 활용)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사된 정부 통계자료 수집(국가 도서관통계시스템, 2014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법제처 관련조례 등)
 - (신규조사) 전국 229개(특별·광역시의 구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 세종시 및 청원군-청주시 통폐합 사항 반영)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자료 확보 및 분석
- *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 후 담당 공무원이 지역문화실태조사 DB 입력 사이트(tour.go.kr/newloculture)에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 직접입력
-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지역문화지표 자료 구축 및 재가공 : 지표 값을 예산규모, 단위인구 등으로 환산
 - 지표조사 결과 데이터의 표준화¹⁾ : 서로 다른 단위(% , 명, 원, 개 등)로 구성된 지표 값을 같은 단위로 변환
 - 전문가 대상 AHP²⁾조사를 통한 가중치 산출 : 평가요인을 계층화 한 후 단계적으로 중요도 도출
 - 표준화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화 : 표준화된 지표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지수화
 -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 : T-test, 분산분석(ANOVA)³⁾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재정자립도, 시-군-구 등의 기준에 입각한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

1) 표준 점수(standard score)라고 하기도 하며 주로, Z-score로 불린다. $z = (x - \text{mean}) / \text{standard deviation}$ 으로 구해지며, 한 표집 자료에서 모든 z점수의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이 된다.

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두뇌가 단계적 또는 위계적 분석과정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Thomas L. Saaty교수가 고안한 모델이다.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으로, 가중치를 산정하는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계층 분석 과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3) T-test: 두 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분석방법, ANOVA: 세 집단 이상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분석방법

□ 종합 순위 (전국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 지역문화실태조사 전국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

- ① 전북 전주시 ② 경기 수원시 ③ 경남 창원시 ④ 경기 부천시 ⑤ 경북 안동시
⑥ 전남 강진군 ⑦ 충북 청주시 ⑧ 경북 경주시 ⑨ 서울 성동구 ⑩ 경기 양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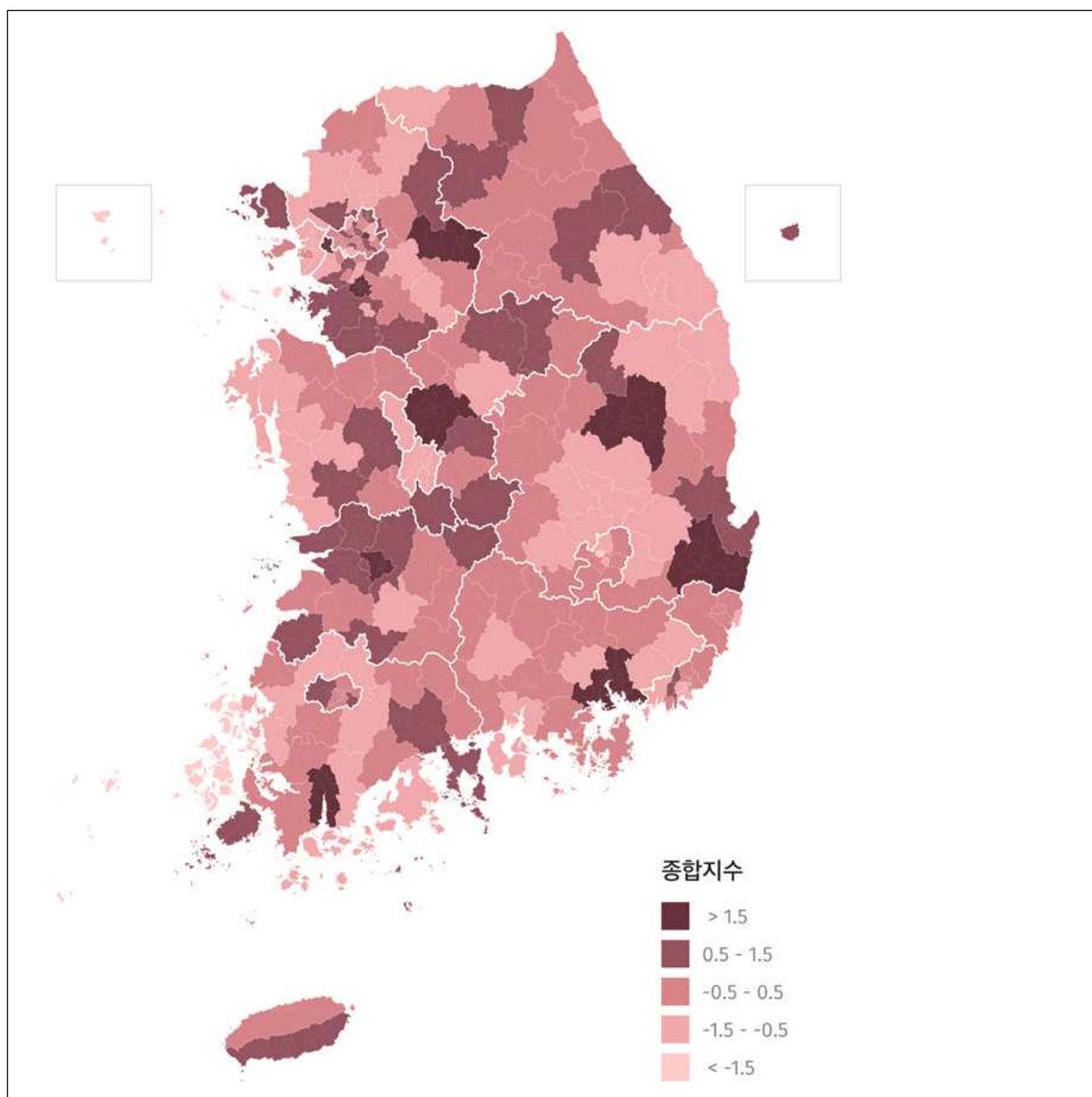
- 시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군지역은 전라남도 강진군, 구지역은 서울 특별시 성동구의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북 전주시) 지역문화 정책·자원·활동·향유 모두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며, 특히 정책과 활동부문이 높게 나타남.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수, 다문화가족 지원운영 예산, 문화관광 해설사 수, 지역문화 전문인력 수 항목의 값이 특히 높게 나타남
- (전남 강진군) 2012년 기준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지역문화 정책부문이 특화된 지역으로 확인. 총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인구 천명당 문화 예산규모, 인구 천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율 항목의 값이 두드러짐
- (서울 성동구) 2012년 기준 조사 대비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민을 위한 문화 향유부문이 높게 나타남. 또한 인구 천명당 문화 기반시설 이용자 수, 인구 천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 문화 관광해설사 수,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건수 항목의 값이 높음.

□ 시군구 기준별 상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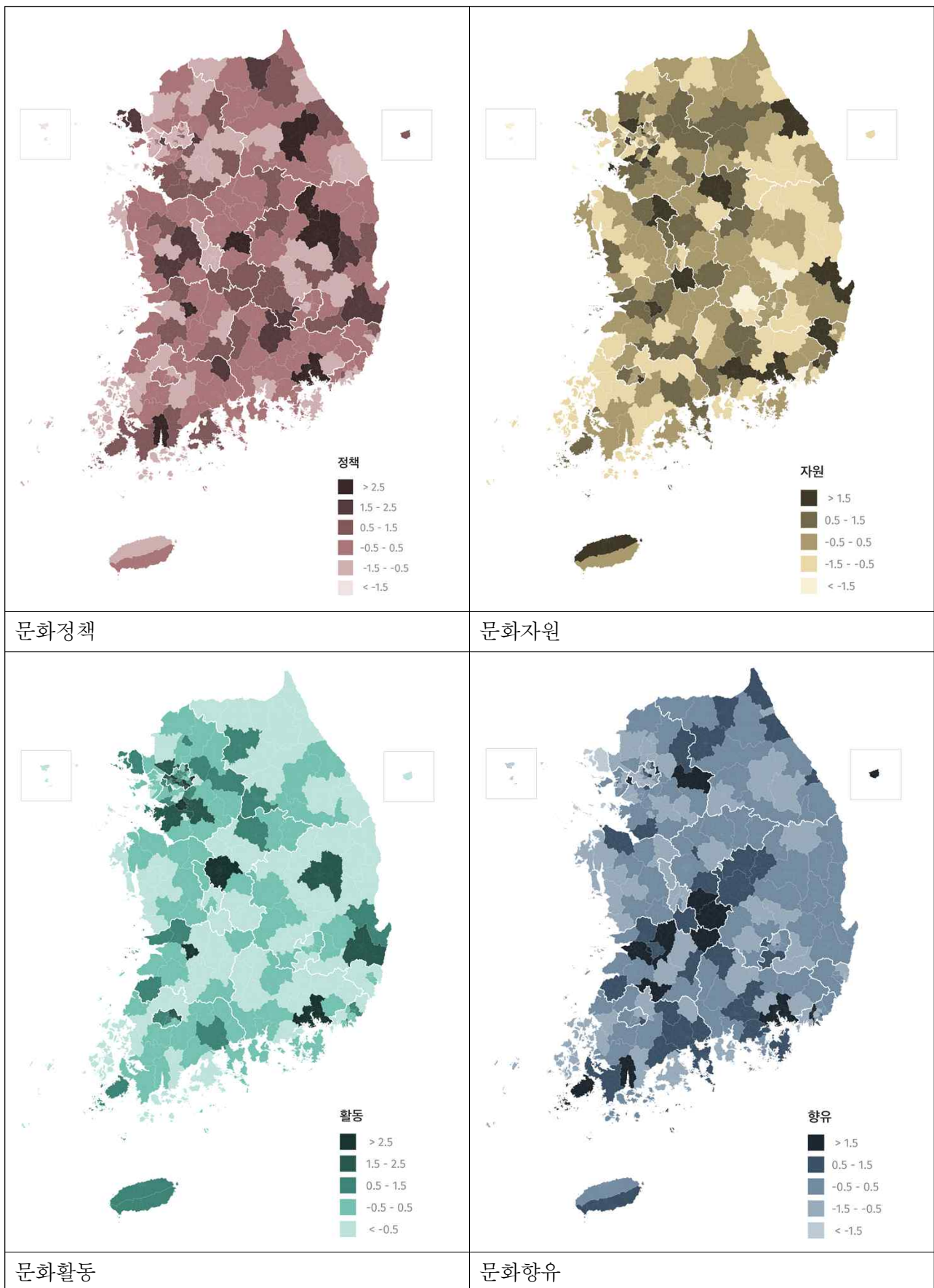
구분	상위지역 (10개)
시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북 안동시,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전북 익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구리시
군	전남 강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전북 완주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양구군, 전북 순창군, 충북 영동군
구	서울 성동구, 부산 사상구, 서울 중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작구, 부산 서구, 서울 종로구, 서울 강동구, 부산 북구, 광주 동구

□ 대분류별 상위지역

대분류	내용	상위지역 (5개)
문화정책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집행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전남 강진군, 전북 전주시, 강원 평창군, 경북 영주시, 경북 안동시
문화자원	문화유산, 문화인력, 문화자원에 대한 보유 및 관리가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기 고양시, 경북 포항시, 광주 동구
문화활동	지역 내 문화전문인력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및 활동이 활발한 지역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서울 동작구, 충북 청주시
문화향유	지역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무료 공연 및 교육 등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	부산 사상구, 전북 완주군, 경기 구리시, 경기 양평군, 전북 무주군



< 2014년 기준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



<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대분류별 지수 결과 >

- (수도권·비수도권) 2012년 기준 종합지수 결과에 비해 격차 완화
 - 2012년 기준 : 수도권(0.140) > 비수도권(-0.057)
 - 2014년 기준 : 수도권(0.028) ≒ 비수도권(-0.011)
 - 특히 정책과 향유 부문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정책 : 수도권(-0.040) < 비수도권(0.016)
 - 향유 : 수도권(-0.042) < 비수도권(0.017)
 - 문화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 활동 : 수도권(0.102) > 비수도권(-0.041)
- (재정자립도) 자원, 활동은 자립도高 지역, 정책은 자립도低 지역 우위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자원·활동부문 평균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2012년과 동일)
 - 재정자립도 上: 자원(0.010), 활동(0.066)
 - 재정자립도 下: 자원(-0.009), 활동(-0.064)
 - 반면, 정책 부문의 경우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
 - 재정자립도 上 정책(-0.026) < 재정자립도 下 정책(0.025)
 - 향유 지수에서는 상호간 의미 있는 격차를 보이지 않음.
- (시, 군, 구) 정책, 자원, 활동 영역은 시(市) 우위, 향유는 군(郡) 우위
 - 종합, 자원 지수의 경우 시의 평균이 군·구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종합 : 시 0.118(H) > 군 -0.049(L) ≒ 구 -0.075(L)
 - 자원 : 시 0.021(H) > 군 -0.013(L) ≒ 구 -0.008(L)
 - 정책 지수의 경우 시·군의 평균이 구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정책 : 시 0.037(H) ≒ 군 0.042(H) > 구 -0.092(L)
 - 반면 향유 부문에서는 군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향유 : 군 0.021(H) > 시 0.006(M) > 구 -0.032(L)

- (도시, 도농통합, 농촌) 자원, 활동 영역에서 도시부문 우위
 - 도시 지역 자원 및 활동의 평균값이 농촌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지역격차가 있음을 확인
 - 다만, 정책과 향유 부문은 의미 있는 격차를 보이지 않음.
- 2014 행정자치부 지방단체 행정구역 구분 활용

4

세부지표별 조사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 지역문화정책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결과 요약
문화 정책	수립 및 실행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유무	◦ 229개 자치단체 중 35개 지역(15.3%)만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수	◦ 229개 자치단체 중 120개(52.4%)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기획·발주한 문화관련 사업에 선정 추진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추진 건수	◦ 2014년 한 해 동안 기초자치단체 평균 9.49건의 자체 기획 문화사업 추진
	정책 환경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유무	◦ 총 229개 중 89개(38.9%)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문화진흥기관이 설립
		문화관련 조례 제정 유무	◦ 2014년 한 해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0.28건의 문화관련 조례 제정 ◦ 229개 자치단체 중 49곳에서 문화 관련 조례 제정
	문화 예산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 비율	◦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은 평균 1.9% 수준임 * 시(2.4%) > 군(2.0%) > 구(1.2%) ◦ 특별·광역시보다 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도 평균 (2.23%) > 특별·광역시 평균(1.31%)
		천명당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예산 규모	◦ 인구 천명당 문화 관련 예산(전국평균) 80,289천원 * 군(141,653천원) > 시(72,836천원) > 구 (14,600천원)

□ 지역문화자원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결과 요약
문화 자원	문화 유산	기초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수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2014년 한 해 동안 80개 지자체에서 총 179건의 문화재가 신규 지정 - 시도지정문화재 : 35개 지자체, 81개 문화재 - 등록문화재 : 40개 지자체, 61개 문화재 - 문화재자료 : 24개 지자체, 37개 문화재
	기반 시설	문화기반시설 수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모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7.5개 운영 - 수원시, 창원시가 가장 많이 운영(각 25개) - 인구 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6.93개
		생활문화시설 수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생활영상시설, 작은도서관)	- 전국 229개 자치단체 모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7.9개 운영 - 인구 십만명 당 생활문화시설 수는 5.28개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유무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60개의 기초자치단체(26.2%)만이 공공설립 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모유수유시설을 갖추고 있음
	자원 활용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준수여부 및 좌석비율	-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161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설립 운영 공연장에 장애인 좌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공연장의 장애인 좌석 설치 비율은 100%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 일수	2014년 연간 평균 151.6일 가동 - (상위) 세종 244일, 서울 199일, 대구 197일 - (하위) 대전 89일, 울산 96일, 부산 106일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2014년 기준 전국 지역축제 예산은 평균 846백만원 - 충청남도(1635백만원), 경상남도(1464백만원), 강원(1275백만원) 순으로 관내 기초자치단체 평균 축제 예산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
		일인당 장서수 증가율	2014년 기준 전년대비 장서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동두천시 - 광주광역시의 관내 자치단체의 도서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높음.

□ 지역문화 활동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결과 요약
문화 활동	활동 현황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229개 중 160개 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을 보유 - 서울특별시가 총 265개로 가장 많으며, 경남(95개), 부산(91개) 순
	활동 인력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229개 자치단체 중 65.9%인 15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고용 - 가장 많이 고용한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
		일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일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은 93.57%
		문화관광해설사 수		229개 자치단체 중 155개(68.0%)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 경기도 수원시가 가장 많이 보유(61명)
		지역문화 전문인력 수	문화복지전문인력	2014년 현재 전국 총 56명 활동 - 충남 금산군이 5명으로 가장 많음.
			문화예술교육사	2014년 기준 전국 2,117명 활동(기초자치단체당 9.24명) - 서울 > 경기 > 전북 > 광주 순

4. 지역문화 향유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결과 요약
문화 향유	지역 주민	천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2014년 기준 전국 179개 자치단체에서 무료공연 제공(자치단체 평균 43.1건) - 인구천명당 평균 0.26건 - 충북(0.48건), 전북(0.44건), 경기(0.42건), 강원(0.41건) 순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 전국 평균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 횟수는 평균 7.5회 -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 중구(평균 42회)
		천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규모		인구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 달성군(천명당 6,099천원)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229개 자치단체 중 98개(42.8%)가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추진 - 기획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한 지자체는 경기도 구리시 (총 40건)
	소외 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율		(시도) 경상남도가 가장 높은 집행율을 보임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율이 가장 높았던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담양군 (99.6%)
		천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건수		229개 자치단체 중 80개(34.9%)가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지자체 평균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 예산액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북도

전국 방방곡곡 문화정보, 지역문화피디가 전합니다

- 지역문화피디 6월 23일부터 모집, 7월부터 본격 활동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 이하 정보원)과 함께 국내 문화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정보를 영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인, 지역문화피디(PD)를 6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된 지역문화피디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역문화피디사업은 영상 제작 실력을 갖춘 문화피디를 양성해 국내 지역 곳곳의 문화현장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튜브나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올해 9기로 활동할 지역문화피디의 모집기간은 6월 23일(목)부터 7월 4일(월)까지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문화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약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지역문화피디는 7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4박 5일간의 교육캠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지역문화피디는 활동 기간 동안 영상 제작에 대한 기본교육뿐만 아니라, 영상전문가 초청 강의, 영상 제작 현장 방문 지원 등 더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지역문화피디는 이러한 양성 과정을 통해 실제로 문화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함으로써 영상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게 되고 제작에 대한 활동비도 지원받게 된다.

지역문화피디로서의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전문제작팀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원의 수탁사업과 연계한 실전 영상 제작 기회를 제공받고 전문적인 영상 제작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받아 문화피디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다음 연도 해외문화피디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역문화피디사업은 정보원과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밖에 교육캠프 기간 동안에는 활동자의 편의를 위한 숙식 등이 제공된다.

정보원 김소연 원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모집되는 지역문화피디의 활동을 통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미디어 분야로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역문화피디가 제작한 콘텐츠는 문체부 문화포털(www.culture.go.kr)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ultureport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지역문화피디 모집 포스터



문화현장의 톡톡튀는 영상을 제작할 9기 지역문화PD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만19세 이상 비수도권
- 대도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분
- 기획, 촬영, 편집 등 1인 영상제작이 가능한 분
-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보유한 분
- SNS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활동 능력을 보유한 분
- 대구지역에서 교육 및 정기회의 참석이 가능한 분

주요활동

- 문화포털 문화영상 및 문화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문화PD 교육프로그램 참여

구분	기간	내용	총교육시간
집중교육	7월 11일 ~ 15일(5일)	기획, 촬영, 편집 실습	36시간
보수교육	7.9, 11월 중(총 3일)	콘텐츠 기획 및 결과를 점검, 특강	24시간

* 총 5일간 진행 예정인 기본교육기간 중 식비 지원되며, 대구지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 기본교육기간 중 숙박 지원
* 집중교육기간 중 야간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으며,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불참 시 수료 및 향후 문화PD 활동 불가

- 교육장소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교육실(대구콘텐츠허브 6층)
한국문화정보원(서울) - 보수교육 및 특강 1회

지원내용

- 영상제작 교육 및 활동, 문화·미디어분야 중사자 특강 교육(총 60시간)
- 교육기간 중 식사 및 숙박지원
- 해외문화PD 모집 시 가산점 및 문화PD 전문제작팀 활동 기회부여(활동우수자에 한함)
- 콘텐츠제작비 지급
- 수료증, 문화PD 명함 발급
- 콘텐츠 제작능력 향상 및 제작한 콘텐츠를 대국민 서비스 기회 부여

활동기간

- 2016년 7월 11일(월) ~ 2016년 12월 5일(월)
(집중교육 : 7월 11일(월) ~ 7월 15일(금) 4박 5일간)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필수)
- 영상면접파일(필수)
 - * 영상면접파일의 경우 하단의 사전질문과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자유형식으로 제작하여 3분 이내(50MB 이하) 파일로 제출하되 호환성이 좋은 코덱을 활용하여 제작하며, 재생에 문제 발생 시 선별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영상면접파일 사전질문
 - 질문1 : 지역문화PD에 대한 이해 및 참여 동기
 - 질문2 : 문화영상 및 콘텐츠 창작활동 계획(제작하고 싶은 소재 등)
 - 질문3 : 본인이 문화PD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 기타 하고싶은 말
- 포트폴리오(선택)
 - * 포트폴리오 영상 첨부 시 100MB 이하의 파일로 제출(2개이하)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16년 6월 14일(화) ~ 7월 4일(월)
- 접수기간 : 2016년 6월 23일(목) ~ 7월 4일(월)
- 접수방법 :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 또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www.dip.or.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을 통한 접수
- 접수처 : js@dip.or.kr

제출방법

- 지원서, 자기소개서, 영상면접파일, 포트폴리오를 1개의 파일로 압축
- 메일과 첨부파일의 제목은 '9기 지역문화PD_000'로 작성하여 제출
(예시) 9기 지역문화PD_홍길동

일정

- 선발기간 : 2016년 7월 5일(화) ~ 7일(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년 7월 7일(목)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교육 : 2016년 7월 11일(월) ~
- * 집중교육기간 : 7월 11일(월) ~ 7월 15일(금) 4박 5일간

기타 문의

- 053) 655-0099 / js@dip.or.kr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기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식품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장선다

- 2016 글로벌 K-Food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 주요내용 》

◆ 청년에게 해외수출현장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식품분야 인재양성 및 식품수출기업 취업 연계 강화

○ 파견국가 및 인원: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홍콩,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등 10개국 총 16명

* 파견기간 : 3개월~1년(국가별 상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농식품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 확대·창출을 위해 “글로벌 K-Food 인턴십 프로그램”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개국 현지 기업에 16명의 청년을 파견할 예정이며 해외 식품분야 청년일자리 창출과 해외실무경험을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

○ 특히, 청년들의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세계 속의 한국식품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을 기대하였다.

□ 그동안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지사를 통해

식품·외식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근무기간, 안전성,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여 최종 연수기업 16개사를 선정하였다.

- 선발되는 청년들에게는 비자수수료와 보험료, 왕복항공료와 체재비 일부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 국가의 aT 해외지사를 이용하여 청년들의 보험, 비자, 안전 등 현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관은 “2015년에는 아시아 국가에 총 6명을 파견하였는데, 올해는 유럽 국가까지 포함하여 대상을 두배 이상 확대하였다. 올해 운영실적을 토대로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 계획”임을 밝혔으며
- 또한, 해외로 떠나는 청년 인턴들에게 “대한민국의 농식품 산업 발전과 개인의 글로벌 역량제고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길 바라며, 특히 현지에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추진배경 〉

- ❖ 청년들의 해외실무경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 및 미래인재 육성
- ❖ 해외기업과 한국인재 매칭을 통한 미래 글로벌 일자리 잠재 수요확보

□ 발대식 목적

- (글로벌) 글로벌 식품전문가 육성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K-Food 인턴쉽 프로그램” 대외 어필, 식품분야 일자리창출 선도이미지 전달
- (일자리 창출) 식품분야 글로벌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견인역할
- (K-Food 홍보) 인턴쉽 운영연계, 세계 속의 K-Food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
- (교육) 파견예정인 청년인턴에 동기부여 및 국가별 유의사항 교육 등

□ 행사개요

- 일시 / 장소 : 2016. 6. 27(월) 16:00~18:30 / aT센터 3층 미래로움 II
- 참석대상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등, (aT) 식품수출이사 등 4, (인턴) 선발자 등 15명 ※ 기파견(1명) / 총 21명

※ 10개국(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홍콩, 베트남, 태국, 필리핀) 16명

○ 행사일정

구 분		주요내용	기 타
1 부	15:40~16:00	등 록	
	16:00~16:10	‘15,’ 16년 해외인턴 프로그램 설명	사회자
	16:10~16:30	‘15년 해외인턴 수료 회원 발표	최윤희(중국 북경)
	16:30~17:30	[특강] 글로벌 인재로서의 비전설정과 동기부여	전문강사
	17:30~18:00	해외인턴 파견예정자 교육	식품기획부
2 부	18:00~18:10	해외인턴 활동다짐 선서식	선서대표(남1,여1)
	18:10~18:15	파견자 격려말씀	식품산업정책관
	18:15~18:20	파견자 격려말씀	식품수출이사
	18:20~18:30	사진촬영	참석자 전체

지난 3년간 농식품 핵심규제개혁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발표 - 농식품부와 법제처 협업으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 -

《 주 요 내 용 》

	규제개혁 성과 및 추진계획
① 지난 3년간 핵심 규제 개혁 성과	◇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 마련 *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지정, 진입도로 확보의무 개선 등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이용 효율화 * 들녘경영체 요건완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원료 확대 등 ◇ 식품산업 및 전통주 육성 * 소규모 탁·약주 생산 판매 허용 등 ◇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 꼭지 없는 수박 유통 등 ◇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 활성화 * 농지연금 규제 완화 및 축산업 의무교육 개선 등
②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	◇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③ 법제처 협업 과제 추진계획	◇ 인허가 및 협의 간주제도 확대 도입 * 민영 도매시장 허가 등 2개 과제 ◇ 신고 합리화 *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등 6개 과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공동으로 생명환경쌀* 주산지인 경남 고성군에서 “지난 3년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2016년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주제로 2016년도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 하였다.

○ 현장포럼에는 농식품부 장관, 법제처장과 농진청 국립과학원장, 기능성 농산물 생산자, 들녘경영체 관계자,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및 한식연 전문가 등 약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현장포럼은 농식품부와 법제처의 안전보고에 이어 농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규제개선 관련 발제, 규제개선 수혜자 사례 발표와 현장 건의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농식품부는 “지난 3년간 규제개선 성과 및 2016년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 안전보고에서 지난 3년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핵심규제개혁 대표적 성과사례를 보고하였다.

Part I 지난 3년간 농식품 핵심 규제개선 성과

- 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6차 산업 지구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6차산업 발전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 (기존)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 등에 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대폭 단순화 필요
- (개선)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제도를 도입,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제조, 유통, 관광 등 일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6월 및 하위법령 제정, '15.6월

**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 ('14년) 3개소 → ('15년) 9개소 → ('16년) 13개소

(사례)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선정 **13개소**(영동, 순창, 하동, 횡성, 서천, 영광, 문경, 의성, 서귀포, 강릉, 평창, 공주, 장수, 함양) 지정 및 운영중

- 순창 장류지구는 금년 4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하여 순창 장류지구내 음식점 설치를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

-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설치시 진입도로 확보 의무 개선

- (기존)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 6차산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 시,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 확보 의무화
- (개선)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가공·유통·판매 시설 등은 도로기준 적용대상 제외하여 기존도로 활용

(사례) 경기도 용인 A 목장은 방문객 증가에 맞춰 유가공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4m 진입도로 확보 의무(약 1억원 소요)로 공장 설립이 불가하였으나, 규제개혁으로 유제품 생산 공장을 건립중이며 9월중 완공 예정(1만 8천개 경영체 수혜, 약 1조 8천억원 경제적 효과 예상)

□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

○ (기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관광·휴양사업은 미포함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는 관광·휴양사업 포함(농업경영의 부대사업)

(사례) 충남 청양 천장리영농조합법인(알프스마을)은 얼음축제, 조롱박축제 등을 통해 35만명의 관광객 유치, 매출액 22억원 달성('15)

○ (개선)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까지 확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5.1월)

(사례) 개정 이전 농업회사법인 4,883개소('14년 말 기준)중 140개소가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경기도를 중심으로 농업회사법인은 관광농원으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농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 (기존) 조식 제공 불가 → (개선) 2015년 7월 조식 제공 허용

(사례) 투숙객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조식제공 허용('15년말 현재 1,536개소에서 조식 제공 중)

②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들녘경영체* 진입요건 완화 및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

① 들녘경영체 선정 및 지원기준 요건 완화

○ (기존) 들녘경영체 선정 및 지원기준 요건 제한이 진입규제로 작용

- 선정요건: RPC 연계 및 50ha이상의 집단화된 경작지 확보

- 지원기준: 지원장비 종류를 3종(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으로 제한
- (개선) 진입요건·지원기준 완화(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개정, '14.9월)
 - 선정요건: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

(사례) 경남 함양군 A, 강원 원주군 B, 황성군 C 들녘경영체는 전형적인 중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20~30ha 규모의 농지가 계곡을 따라 분산 조성되어 있어 기존 시행지침으로는 선정이 불가능하였으나 선정요건을 개정에 따라 '15년도부터 들녘경영체 사업자로 선정되어 운영 중

- 지원기준: 지원장비를 기존의 3종에서 작업기 등 다른 종류의 공동 영농장비도 지원토록 개선
- ②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
 - (개선)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50ha → (개선) 400ha로 확대(규칙 '14.12월)

□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제한 완화(' 14.12월)

- (기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농산물 가공 및 사료생산 시설 면적이 협소하고, 판매장의 취급품을 농산물로 제한
- (개선) 농산물 가공시설 허용면적을 1ha→1.5ha, 사료 제조시설은 1ha→3ha로 확대하고,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
- 판매장 취급품을 농산물에서 임축산물농림축산 가공품까지 확대

(사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업진흥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제로 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은 취급 불가능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학교 급식 재료로 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 사용 가능

③ 식품산업 및 전통주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식약처 협업)

- (기존) 농가의 소자본으로는 식품위생법 상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는 시장·군수가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보급(' 14.9월)
 - (' 13) 4개 시·군 → (' 14) 19개 → (' 16.5월) 144개

(효과) 농산물가공 작업장의 평균 면적(132㎡) 기준시 농가는 **약 2천만원 수준의 시설 설치비용 경감**(작업장 칸막이 설치비, 지하수 개발비 등)

□ 소규모 탁·약주(하우스 막걸리) 생산·판매 허용

- (기존) 소규모 탁·약주는 생산과 판매 불가
- (개선)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 기준(1kl이상 5kl미만)을 마련하여 직접 음식점 등에서 탁·약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 탁·약주의 고급화로 다양한 소비자 취향 충족, 전통주와 음식의 결합을 통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 전통주 인터넷 판매범위 확대

- (기존) 제조자, 우체국, aT, 지자체로 한정 → (개선)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 나라장터 까지 확대

(효과) 농협 쇼핑몰에서 전통주 판매를 '15.9월 개시하여 '16.5월까지 4,500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는 등 전통주 판로 다양화 및 판매액 증대

□ 브랜드 제조시설 기준 완화

- (기존) 담금조 5kl +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25kl이상 +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5kl이상 → (개선) 담금조 5kl + △원액숙성용 나무통,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5kl이상으로 완화

(효과) 기존 제조시설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100~180만원 수준인 오크통 114개가 필요(약 1억 5천만원 소요)하여 브랜드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에 초기 부담이 크게 되었으나, 규제완화로 50% 이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브랜드 제조 활성화 기반 마련

④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꼭지 없는 수박 전국 유통('16년 4월)

- (기존) T자형 꼭지 유통 → (개선) 수박꼭지 제거후 유통

(효과) 노동력 절감, 가치하락 방지로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의 실효성 제고

- (기존) GAP 인증절차 복잡성으로 안전 농산물 공급 확대 곤란
 -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복잡한 서류(12종)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에 장기간 소요(최대 126일)
- (개선)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14.9월)

* 구비서류 감축(12종 → 3종) 및 인증기간 단축(최대 126일 → 42일)

(사례) GAP인증 제도 개선으로 톤당 10만원의 농가부담 비용 절감

* 인증건수 : (13년) 2,499 (14년) 2,689 (15년) 4,019 (16.5월) 4,626

□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관세청 협업,'15.5월)

- (기존)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절차 이행으로 수출 제약
 - *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등 서류 구비 필요
- (개선) 국가가 인증하는 **‘농산물인증(등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지정하여 원산지 증명 간소화에 따른 FTA 활용 확대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 4종의 서류에 대해 인정 조치

(효과) 증빙서류 감축(5종 이상 → 1종, 사후검증 생략)으로 수출 건당 40시간/50만원 비용절감

□ 인삼수출 경쟁력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포장 규제 완화('16.5월)

- (기존) 인삼류 포장 중량별(600g, 300g 등), 크기별(특대, 대, 중, 소) 포장단위 획일화



<보닐팩 포장>

- (개선) 기존 규격 외 날개포장, 상품성이 우수한 인삼의 포장규격(9편급) 신설

⑤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 하였습니다.

□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절차 개선(' 15.3월)

- (기존)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나, 농업인 부부는 맞벌이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선)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농업인 맞벌이 증명이 가능하도록 개선(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 고령농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규제 개선

- (기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담보농지 가격의 2%의 가입비 납부
 - * 농지연금 신규 가입 현황 : ('13년) 725건 → ('14년) 1,036건 → ('15년) 1,243건
- (개선)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 가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지 연금 가입비는 폐지

(효과) 경기도 양평의 전○○씨(66세)의 경우 가입당시 배우자가 60세였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 의해서는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제도 개선으로 연금가입이 가능해져 매달 1,072천원 연금수령 가능(제도개선 이후 '16.6월까지 총 305명이 가입, 혜택을 보고 있음)

□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시 집합교육 참석 의무화
- (개선) 인터넷 교육과정을 통한 의무교육 이수 가능('15.12월)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규제 완화

- (기존) 임업용 산지에서 가축방목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면적도 3ha로 제한
- (개선)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대폭 완화(3ha→5ha) 및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①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현황) 농업 6차 산업화 관련 허가, 입지, 시설 요건 등 규제 상존

- 6차 산업 인증사업자 의제제도 : 12개 법률 24개 항목만 의제
- 농촌체험관광 사업자 : 마을 단위 공동체만 허용
- 농어촌 민박 사업 : 연면적 230㎡ 미만의 1개동으로 제한

□ (개선)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혁신

-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의제제도 : 6차 산업 인허가시 요식업, 숙박업, 식품 제조업 등의 추가 의제제도 도입(약 12개)

*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하반기) :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

- 농촌체험관광 사업자 :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농장, 관광농원, 스마트팜 등 개별경영체까지 확대

* 도농교류법 제8조~제10조 개정

- 농어촌 민박 사업 : 기존의 부속 건물을 개조한 별채 등을 포함

□ (기대효과) 의제제도 추가도입으로 개별등록 불편 해소, 6차산업 활성화로 체험마을소득 연간 50~100억원 증대, 133명 일자리 창출

②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무농약 인증 1년간 전환기간 제한 폐지

- (현행) 최근 1년간 재배방법을 무농약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토양만 무농약 인증 신청 가능
- (문제점) 무농약 인증을 신청전에 1년간 전환기간으로 요구함에 따라 농업인의 무농약 신청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 무농약 인증 신청 요건으로 1년간 전환기간 요구 삭제
- (기대효과) 전환기간 폐지에 따라 농업인의 진입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신규 무농약 인증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제도 통합

- (현행)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제품인지를 알려주는 공시제도와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도를 동시 운영
- (문제점) 공시제도는 친환경농업에 사용가능여부만 공시하는 것으로 농가에 효능이 보증된 것으로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품질인증은 보증기준이 높아 생산 제품수가 매우 저조
- (개선)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이원화된 유기농업자재 제도를 공시제로 통합하여 효능·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자율적인 효능·효과 표시로 농가의 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손실 방지

- 법제처는 올해 규제개혁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개선될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 인가, 허가, 신고는 민원사무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이에 법제처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영업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신고규정 201건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 ① 인허가 및 협의 간주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② 신고제를 유형별로 구분해 간주 규정 또는 신속한 접수 의무를 도입한다.
 - * **인허가 간주 제도** : 처리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는 제도(총 62건의 인허가에 확대 도입)
 - ** **협의 간주 제도** :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보는 제도(총 28건의 복합민원에 확대 도입)
 - 현행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 없는 신고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 **수리가 필요한 신고** :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 규정 도입(총 85건의 신고에 확대 도입)
 - **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신고서 및 첨부서류)을 갖춰 제출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화(총 15건의 신고에 확대 도입)

- 약 1,300건의 신고규정 중 영업신고 등 100건의 과제를 우선 선정하였고, 나머지 1,200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 법제처와 농식품부·산림청 협업으로 민영도매시장 허가 등 8개 과제에 대한 농식품 분야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주요 개선과제>

주요 개선과제		법령	개선내용
인허가 간주	■ 민영 도매시장 허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처리기간을 30일로 신설하고, 처리기간 내 허가 여부 또는 지연 사유 미통지 시 허가 간주
협의 간주	■ 산지에서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 지정·결정 협의	산지관리법 제8조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
신고 합리화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수리를 요하는 신고)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 미통지 시 수리 간주
	■ 비료수입업 신고	비료관리법 제12조	
	■ 양곡가공업 신고	양곡관리법 제19조	
	■ 인삼류 제조업 신고	인삼산업법 제12조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축산법 제17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규정
	■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이번 제도개선은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보다 예측가능하게

규정하고, 처리기간 준수율을 높여 국민중심으로 개편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제2차 규제개혁현장포럼에서는 “기능성 농산물 보급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및 “친환경농업 및 들녘경영체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농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제와 현장 규제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 농식품부와 법제처는 이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규제제도를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개 요

○ 일 시 : '16. 6. 24(금) 15:00~17:00

○ 장 소 : 경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 (사전시찰) 농업기술센터전시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미생물배양연구소,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시설

○ 참석자 : 총 20여명

- 법제처, 경남도, 고성군, 농진청, 농경연, 한식연 및 들녘경영체, 수출기업 등

□ 주요내용

○ 농식품 주요규제개선 성과 및 하반기 계획

□ 세부일정(안) : 총 120분

시 간		주요 일정	비 고
사전시찰 14:00 ~ 14:20	20'	◦ 장관님, 법제처장님 도착 ◦ 시찰(20')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전시관→ 농기계임대사업소→미생물배양연구소→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시설	*영접:고성군수 *고성군 농정현황 및 추진계획 발표(부군수)
개회 14:20 ~ 14:30	10'	◦ 개회선언 ◦ 인사말씀(10') - 장관, 법제처장, 경남부지사, 고성군수	
안전보고 14:30 ~ 14:50	20'	◦ 농식품 규제개선 성과 및 하반기 계획(10') ◦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방안(10')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법제처 기획조정관
발제 및 건의 14:50 ~ 15:50	60'	◦ 친환경농업 및 들녘경영체 관련 발제(10') ◦ 기능성 품종 보급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10') ◦ 수혜자 사례발표(10') - 기능성 농산물(당조고추) 생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 현장규제개선 건의 및 토론(30') - 쌀전업농연합회, 고성 들녘경영체, 생명환경쌀 가공유통센터 대표 등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폐회 15:50 ~ 16:00	10'	◦ 마무리 말씀 및 기념촬영	

□ 홍보계획 : 보도자료, SNS(페이스북, 뉴스레터) 등 홍보추진(6.24주간)

참고1

현장포럼 예정지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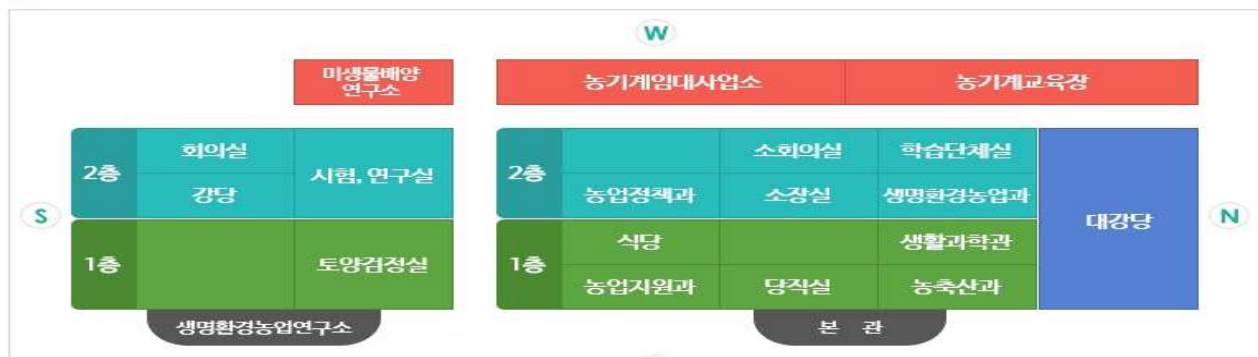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250-7)

○ 현장시찰

- 농업기술센터전시관(공룡나라 쇼핑몰 홍보관) → 농기계임대사업소
→미생물배양연구소→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보관 시설



□ 농업기술센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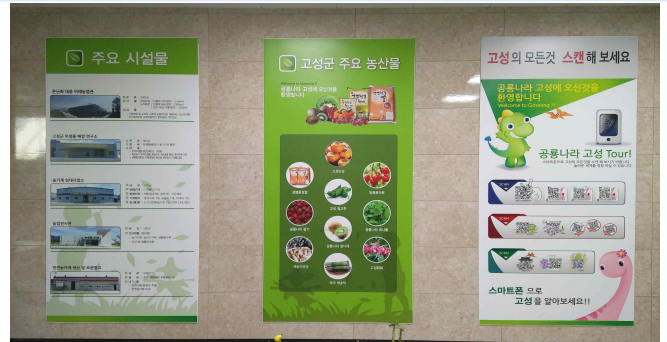
○ 농업기술센터 전시관(공룡나라 쇼핑몰 홍보관)

- 가바(GABA, Gamma AminoButyric Acid)쌀 전시
- 쌀국수, 콩이랑 된장 · 고추장, 고성군 특산품 진열

* 공룡나라 온라인 쇼핑몰 현황

- 오픈 : '08.10.15.(<http://edinomall.com>)
- 입점업체 : 65개 업체 109개 품목
- 연평균 매출액 : 약10억원

※ 2016년 4월 : 누적매출 70억 돌파



○ 농기계 임대사업소

- 16년 임대횟수/일수 : 610회/910일

* 농기계 보유현황 : 122종 185대

- 운영인력 : 7명(정규 2, 공무 1, 기간 4)
- 임대료 : 5~210천원/일
(농기계 구입가격의 0.5% 정도)



○ 미생물 배양 연구소

- 멸균배양실, 살균배양실, 기계실, 저온저장실, 보관실 등 구성
- 사용방법 : 가축(사료혼합급여 등), 농작물(토양 분주 등)

* 미생물 생산능력 : 11톤/주

- 주요공급처 : 축산농가, 한우협회



○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보관 시설

- 제조 보관창고 : 천연식물 추출액 제조(연9천), 환원수 및 천연농약 보관(연20,000 ℓ)
- 생명환경 자재 체험장, 보관장, 지역 미생물 제조장



폐자원 활용부터 악취제거까지...정부3.0 환경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환경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경진대회를 22일 코엑스에서 개최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공요인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3.0 환경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이번 경진대회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비롯하여 오철호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 등 정부3.0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국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우수사례 발표, 현장 평가,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 경진대회에는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0개 기관에서 제출한 총 64건의 환경행정 사례 중 정부3.0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 22일 발표되는 우수사례 8건은 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이 최종 선정된다.
- 우수사례 8건에 선정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북 남원시, 서울 중구, 서울 서초구, 서울 노원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다.
- 충청남도는 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폐자원을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적정기술 사업인 '나눔을 위한 선택'을 보급하고 확산했다.

- 경상남도는 단순 소액 사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을 무료로 지원했다. 전북 남원시는 혐오시설인 생활폐기물 기계화시설을 남원·임실·순창군 등 3개 지역에서 공동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했다.
- 서울 중구는 중앙시장에서 발생하는 돼지 부산물의 악취해소를 위해 구청·상인·지역주민이 협업하여 해결했다. 서울 서초구는 어린이집 50곳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 서울 노원구는 우수 목재자원 재활용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폐목재를 활용한 자원 순환과정의 체험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 한국환경공단은 관계기관 협업과 수요자 중심의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부터 개량까지 일괄로 서비스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영장 등급제 도입, 예약시스템 구축 등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야영장 서비스를 선보였다.
-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환경행정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환경행정3.0을 통해 환경이 개선되고, 생활도 편리해지며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경진대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의 부대행사로 개최된다.

- 붙임 1. 정부3.0 환경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안).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1 개최 목적

-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분야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부3.0 성과 홍보에 적극 활용
- 환경행정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성과 확산으로 정부3.0 생활화에 기여

2 우수사례 경진대회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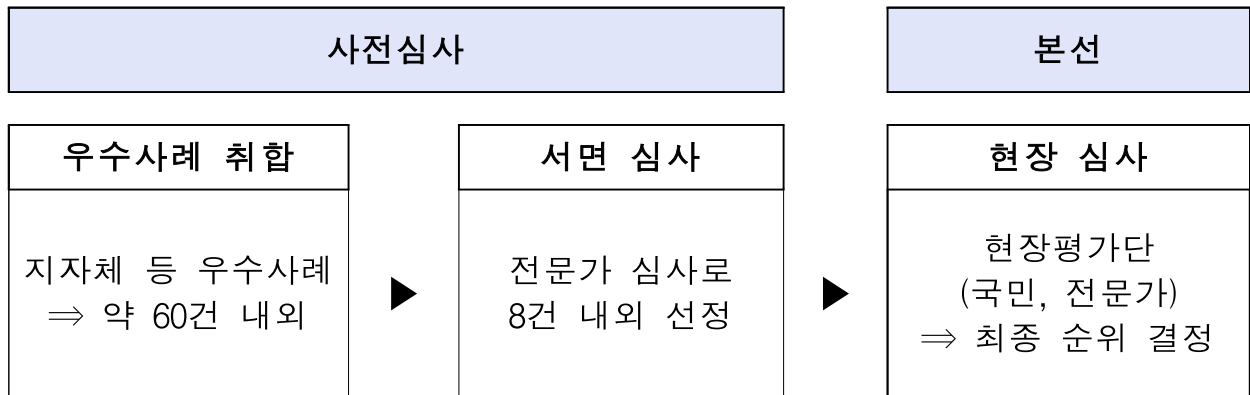
□ 경진대회 개요

- (일시/장소) '16.6.22 / 코엑스 컨퍼런스룸2
 - ※ 정부3.0 국민체험마당과 연계하여 부대행사로 개최
 - 사례접수(~5.20) → 사전 심사(5.23~5.30) → 본선(6.22)
- (참석자) 환경부 차관, 정부3.0 전문가, 일반인 등 약 200여명
- (참여기관)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소속 공공기관
- (참여사례) 환경분야 정부3.0 성과가 도출된 사례로 국민 입장에서 체감도가 높고, 다른 기관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례
 - ※ 범부처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서 기 수상한 사례는 제외

□ 경진대회 주요내용

- (진행방식) 사전심사(서면)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본선(현장평가)에서 순위를 정하는 경연방식으로 진행
- (행사내용) 우수사례 발표, 현장평가, 시상식* 등
 - * (지자체) 총 8건 시상(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장려상3)
- (심사방법) 본선은 현장평가단(80%)+전문가(20%) 심사결과를 합산

하여 우수사례 순위 결정



□ 경진대회 진행단계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 및 제출(~5.20)】

- (대상기관)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 (분야) 정부3.0 분야(투명·유능·서비스정부) 중 선택
- (사례제출) 기관별 1~2건 제출

【우수사례 사전 심사(5.23~5.30)】

- (심사방법) 기관 제출 우수사례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
 - 정부3.0 전문가(정부3.0 추진위원 등)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0건 선정
- (심사기준) 창의성(30), 난이도(30), 효과성(30), 확산가능성(10)

【환경행정3.0 우수사례 경진대회(6.22)】

- 우수사례 발표
 - (대상)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8건
 - (발표) 약 5분 (파워포인트·동영상·역할극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 현장심사 : 우수사례 발표내용에 대해 심사단이 현장에서 평가
 - (일반평가단) 정부3.0 국민체험마당 방문객 등 200여명 내외
 - (전문가심사단) 정부3.0 추진위원 등 전문가 4명 내외
 - (심사기준) 내용 충실성(50점), 발표 완성도(40점), 관중 호응도(10점)

※ 사례 단순발표보다 역할극 등으로 국민체감효과를 발표한 기관에 가점 부여

○ 최종 순위결정 및 시상

- 일반평가단(80%) 및 전문가 심사(20%)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환경부 장관상 및 시상금 수여)

구 분	계	대 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지자체	8 (850만원)	1 (200만원)	2 (각 150만원)	2 (각 100만원)	3 (각 50만원)

□ 경진대회 진행순서(안)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 회	11:00 ~ 11:05	5'	개 회 및 국민의례	
	11:05 ~ 11:10	5'	개 회 사	환경부 차관
발 표	11:10 ~ 12:05	55'	사 례 발 표(8개, 사례별 5분 이내)	
	12:05 ~ 12:15	10'	휴 식(정부3.0 퀴즈이벤트 등)	
시 상	12:15 ~ 12:20	5'	총 평	심사위원장
	12:20 ~ 12:30	10'	시 상 식	환경부 차관
	12:30		폐 회	

□ 경진대회 발표과제

구분	기관명	발표과제
지자체 (6)	서울시 중구	부문간 협업으로 주민숙원 악취 해결
	서울시 서초구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실내공기질 관리
	서울시 노원구	목예원 조성 및 운영
	충청남도	나눔을 위한 선택, 적정기술 보급 확산사업 추진
	전라북도 남원시	협오시설(생활폐기물 기계화시설) 공동 활용
	경상남도	환경분쟁을 무료로 해결해 드립니다.
공공기관 (2)	한국환경공단	영세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부터 개량까지 원스톱 서비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취향에 꼭 맞는 '국립공원 맞춤형 야영장'

붙임2

질의응답

1. 환경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분야의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공요인을 공유하기 위하여 국민과 접점에서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임

붙임3

전문 용어 설명

- (정부3.0)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 및 국민과 공유하고, 정부 부처간 소통·협력으로 일 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사회적기업, 유통·판매 경쟁력으로 파워UP한다

- 6.27(월)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역량강화 교육 진행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이하 진흥원)은 6.27(월) 오후 1시 디캠프(서울시 강남구 소재) 6층 다목적홀에서 사회적기업 상품·유통·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워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상품 기획부터 판로 확보, 홍보에 이르기까지 상품화 전 과정에 걸쳐 꼭 알아야 할 핵심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3차례 연속교육* 중 하나이다.
 - ※ 1차 교육은 상품기획, 가격책정 등 상품화 실무를 주제로 5월 16일 기진행
- 특히 이번 교육은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모바일)채널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입점 프로세스·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3차 교육은 7월 12일, 판로 확보 후 지속적으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주제로 열리며,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 위주로 진행된다.
- 마케팅 역량이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http://onoffmix.com/event/70370>)으로 사전 등록하면 된다.

전국 지역다문화프로그램 6월부터 본격 운영

- 25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뜨거운 관심 속 참가신청 진행 중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지역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지역다문화프로그램’이 참가신청 기간 중 일부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6월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 올해 지역다문화프로그램은 총 25개로,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다문화가족의 주도적 사회참여’, ‘다양한 가족 간 유대강화’라는 3가지 주제 아래 지난 3월 모집 및 선정된 것이다.
- 이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가 조기 마감된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한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참가자 모집이 진행 중이다.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주제로 대전지역에서 진행되는 ‘Healthy-Happy Family to school-society’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부모와 10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통합과 사회적응 강화를 지원하며, 경상북도 ‘다(多)행복 아카데미’의 경우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학습과 가족소통, 지역생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 ‘다문화가족의 주도적 사회참여’를 위해 참가자를 모집 중인 프로그램 가운데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기초능력 지원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와 성인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 및 취업연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레인보우 하모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모집해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고 오는 10월 2회 걸친

실제 공연을 진행한다.

- ‘다양한 가족 간 유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구지역의 ‘글로벌 나눔 컨퍼런스- 인문학 지도책 만들기’는 철학, 사진, 미술 등 6개 분야에 걸쳐 풍속화 그리기, 팝아트 자화상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 지역다문화프로그램들은 이달 사업을 본격화한 이래 오는 7~8월 여름방학, 9월 추석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국민 관심을 환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danuri.mogef.go.kr>) 또는 프로그램 관리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kihf.or.kr, 02-3479-7776~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윤강모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며 “민간단체의 솔선수범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25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주요내용

【붙임】

25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주요내용

<다양한 가족 간 유대 강화>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주요내용	모집기간	수행단체
서울시 (금천구, 은평구, 용산구)	다양한 가족들의 꿈을 담은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 참가대상 : 일반가족 및 다문화가족 ■ 내용 및 일정(안) - 이주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강사 발굴 양성(부모, 6~10월) - 아이사랑/부모사랑 프로그램: 가족워크숍(부모,아이, 6~10월) - home, home sweet home:가족통합 프로그램(부모,아이, 6~10월) - 함께 사는 우리 마음 展/가족사랑 워크숍(6월) - 가족사랑 캠페인: 가족통합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온라인, 10월)	용산구 (7.1-8.31) * 기타지역 모집완료	문화예술NGO 예술과시민사회 (02-549-1887)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다문화·비다문화 가정 평생이웃 · 평생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 참가대상 : 일반가족 및 다문화가족(같은지역 거주자 우선모집) ■ 내용 및 일정(안) - 평생이웃 체험학습프로그램(7~9월 (1차 6월18-19일 / 2차 7월2-3 일 / 3차 7월9-10일 / 4차 7월16-17일 / 5차 8월20-21일 / 6차 8월27-28일 / 7차 9월3-4일) · 한국사회 특수성(남북분단) 이해 체험 프로그램(강원 고성 통일전 망대 및 6.25 전쟁기념관 견학, 통일 기원 티셔츠 만들기)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가족 미니 운동회, 평생이웃·평생친구 결연식) ·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우리 조상들의 그릇· 집 만들기, 천체관측) - 멘토링 프로그램(부모, 9~10월) · 멘토링프로그램(도서관 소풍가기, 박물관 소풍가기, 활동 앨범 만들기, 학교일	6.1-8.25	한국이주여성 연합회 (02-2613-1366)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주요내용	모집기간	수행단체
		과 도와주기, 지역사회 봉사 참여하기, 부모교육 참가하기 중 선택 3가지)		
대구시 (수성구)	글로벌 나눔 컨퍼런스 - 인문학 지도책만들기	■ 참가대상 : 일반가족 및 다문화가족 ■ 내용 및 일정(안) - 인문학 지도책 만들기 : 철학, 사진, 미술 등 6개 분야 · 자기만의 이름표 만들기, 자기 소개 교재 배부(6.25~8.27) · 동화 어린왕자를 읽고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기(6.25~9.3.) · 풍선을 이용한 감정표현과 표정사진 촬영하기(7.2~9.10.) · 개인 촬영사진을 바탕으로 팝아트 자화상 그리기(7.9~9.24) · 한국 혹은 모국의 풍속화 그리기(7.16~10.1) · 곤충과 공생의 세계, 색종이로 인상깊게 본 곤충을 만들어 붙이기(7.23~10.8.) · 시를 쓰거나 그림(그림시)으로 표현하기(7.30~10.15) · 인문학 지도책 전시 및 미디어 콘서트(8.13~10.29) - 인문학 지도책 전시회 및 미디어 콘서트(7.30, 10.29)	1기 (6.1.-6.24.) 2기 (8.1.-8.26.)	(사)달구벌 나눔문화예술 (053-267-6111)
전라남도 (강진군)	“다(多)문화 가족 날다”프로젝트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 ■ 내용 및 일정(안) <다문화양육품앗이교육: 13회기 수료과정으로 10가족 30명씩 2그룹 진행> - 사랑한 다(多) 오감만땅(부모,아이, 5~8월) - 부모교육-다 그럴 다(부모, 5,6,8월) - 조부모가 들려주는 요리이야기:“옛날 옛적에는”(부모,아이, 7~8월) - 양육품앗이 공동체 만들기:“우리동네 육아반장”(부모, 아이, 10월) <“WeStart 육아지도사”양성활동 :양육자 준스텝 교육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교육> - “다(多) 시(始) 만나는 나”(이민자 6명, 6~8월) - 우리는 하나(2회 지역사회 시연봉사활동, 8~9월)	모집완료 (추가모집 검토)	(사)위스타트 (061-434-0095)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주요내용	모집기간	수행단체
서울시	엄마는 민간외교관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 ■ 내용 및 일정(안) - 스피치교육1(부모, 6.16~17) - 토크쇼1(부모, 7.16)) - 엄마학교1(아동·청소년, 7월) - 스피치교육2(부모, 8월) - 토크쇼2(부모, 9월) - 엄마학교2(아동·청소년, 9월)	모집완료 (추가모집 검토)	아시아언어 문화연구소 (070-8676-4585)
경기도 (안산시)	문화의 접촉과 수용을 통한 “토닥토닥 공부방”	■ 참가대상 : 다문화 청소년(13~20세까지) ■ 내용 및 일정(안)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토닥토닥 공부방(청소년, 5~10월) - 다문화발대식(한국호텔 전문대학교) 참가인원 100명(6.29) - 핸드폰으로 단편 영화 찍다 공부방(청소년, 5.10) - 단편영화 제작 시사회(안산 롯데시네마극장, 9.12.) - 상록수 다문화 단편 국제영화제 출품(10.10)	모집완료 (추가모집 검토)	한국다문화 협의회 (031-475-2405)
광주시	아름다운 동행‘따로 또 같이’	■ 참가대상 : 일반가족 및 다문화가족 ■ 내용 및 일정(안) - 행복공감-우리가족,우리아웃(5~6월) - 행복감성-드로잉여행(6~8월) - 행복감성-내 손 안에 영상(6~8월) - 아름다운 동행-따로 또 같이(9월) - 나눔발표회(지역주민 대상, 10.1)	모집완료 (추가모집 검토)	(사)교육문화 네트워크동행 (062-351-3348)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세부내용	모집기간	수행단체
서울시 (전국)	다문화가족 한부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북 제작 ("다행(多幸): 다시 더(多) 행복하게")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대상 ■ 내용 및 일정(안) - 한부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5~7월) · 당당한 나! 행복한 우리가족!(한부모의 자존감 증진) · 건강한 한부모 가족(건강한 가족의 특성, 우리가족 건강지수) · 바람직한 부모역할-대화법, 학습코칭, 자녀 성교육 - 재혼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5~7월) ·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 · 건강한 재혼 가족이란? · 재혼가족을 위한 준비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 등 - 부모교육 실시(8~10월) · 서울여성이주디딤터(8월),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월) - 한부모 및 동반 자녀 가족 캠프(8-10월)	~7.25.	한국가족상담 교육단체협의회 (02- 523-4203)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다문화가족 부모세움 프로젝트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 부모 및 일반가족 부모 ■ 내용 및 일정(안) - 부모교육 역량강화 교육(8~10월) · 교육관 영역-부모됨의 의미 · 소통대화 영역-경청하는 부모, 대화하는 아이 · 감성능력 영역-성공적 삶을 위한 감성능력 키우기 · 학습지도 영역-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부모의 지혜 · 진로지도 영역-자녀의 진로선택 도와주기	1차 (6.15.~7.16) 2차 (8.22~9.3.)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02-424-8377)
대전시	Healthy-Happy Family to School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10대 자녀, 중도입국 자녀 포함) ■ 내용 및 일정(안)	~7.23.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세부내용	모집기간	수행단체
	- Society ! : Let's Go ! Teenage Children !	- 자녀 가정·사회 적응 강화교육(6.18~7.30) - 부모 가정·사회 적응 강화교육(6.18~7.30) - 부모·자녀 통합 프로그램(8.6~10.2)		(042-520-5928)
경상북도	다(多)행복 아카데미	■ 참가대상 :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부모(한국 입국 3년 이상 경과) ■ 내용 및 일정(안) - 건강한 자녀학습 부모교육(부모) - 행복한 가족소통 부모교육(부모) - 활발한 지역생활 부모교육(부모) * 1기 6월~8월 (영천시), 2기 7월~10월	1기 (모집완료) 2기 (6.27.~7.14)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053-850-4264)
경기도 (광명시)	다문화가족 행복 만들기 '널 만나 다행이다!'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 ■ 내용 및 일정(안) - 지도강사 역량 교육(강사)(6.17) - 부모역량 교육프로그램(6.29~9.31) - 관계개선 리더십 교육프로그램(7.25~9.21) - 가족 창의 놀이 프로그램(7.25~8.31) - 가족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7.25~8.31)	6.10~7.20	(사)나눔문화 예술협회 (02-571-3235)
서울시 (서대문 구)	맘으로, 맘(心) 나누기 프로젝트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 부모(초등 저학년 자녀) ■ 내용 및 일정(안) - 매뉴얼 개발(5~6월) - 학교생활 적응지원 부모역할 교육(7~9월)	6.20~6.30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02-372-7533)
서울시 (양천구)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남편 대상 아버지 교육 "슈퍼맨이"	■ 참가대상 :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가족(20가정) ■ 내용 및 일정(안) - 개별 방문교육 및 상담(6.18~7.8, 8.28~ 9.3) - 아버지교육 및 가족체험활동(7.9, 7.23, 8.20, 8.27)	모집완료 (추가모집 검토)	상명대학교 서울 산학협력단 (02-2287-5346)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세부내용	모집기간	수행단체
	돌아왔다”			

<다문화가족의 주도적 사회참여>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주요내용	모집기간	수행단체
서울시 (전국)	다문화가족 부부·부모를 위한 검소한 혼례 교육사업	■ 참가대상 : 다문화 가족 및 일반인 ■ 내용 및 일정(안) - 지역주민의 다양한 가족 지원네트워크 참여 증진(5~10월) -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족을 지원하는 멘토 양성(9~10월)	~6.30.	(사)나눔과 기쁨 (070-4895-1228)
부산시	여 성 결 혼 이 민 자 취업기초능력 지 원사업(key skill project)	■ 참가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성인자녀 ■ 내용 및 일정(안) - 직무기초능력 진단 실시(5.1~6.30) - 부산소재 문화상품업체 대상 대학-기업 간 MOU체결(7.1~8.30) - 문화상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5~6월) - 직업훈련프로그램 실시(9~10월) 및 취업연계(11.1~11.30)	~8.30.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051-200-6503)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꽃자리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인 ■ 내용 및 일정(안) - 1기 5월, 2기 8월 가족 프로그램(이주민·선주민) - 다문화 이해교실(이주민·선주민, 5~10월) - 가족 캠프(이주민·선주민, 8월)	~8.12	(재)원불교 (02-823-4438)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다문화 청소년 뮤지컬 <레인보우 하모니>	■ 참가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20명) ■ 내용 및 일정(안) - 참가자 모집 선발(5~6월) - 뮤지컬 공연 준비(교육, 6~9월) - 10월 뮤지컬 공연(2회 진행)	~6.30	(사)한국 다문화센터 (02-737-0467)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주요내용	모집기간	수행단체
경상북도	건전한 다문화가족 공동체 체험학교 “DK Global School”	■ 참가대상 : 다문화 가족 ■ 내용 및 일정(안) - 드론조종사 직업이해(자녀) - 동물조련사 직업이해(자녀) - 부모직업체험(부모)	~6.30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053-850-1336)
경상남도 (사천시)	6차 산업을 활용한 다문화 창업교실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이주여성) ■ 내용 및 일정(안) - 기술교육(6차산업 창업 역량강화/수공예품,제과·제빵,아열대작물가공 등, 5월~9월) - 다문화부부를 위한 창업 교육 워크숍(9.23~24) - 시제품 품평회 및 창업경진대회(10.25)	모집완료 (추가모집 검토)	사천다문화 통합지원센터 (055-855-4003)
경기도 (부천시)	부천 다문화인들이 “사랑으로 이 웃을 품은 따뜻한 마음”	■ 참가대상 : 결혼이주여성과 일반인(한국 거주 7년 이상 경과) ■ 내용 및 일정(안) - 사랑방 상담사 교육 및 상담체험(결혼이주여성+선주민, 6/4~10/20) - 사랑방 상담사 가족 회복(가족소통 7/9, 7/16, 7/23, 7/30) (가족동행 8/15) - 1:1 자녀키움 멘토관계 맺기(7년 거주 이상 이주민, 2년 거주 미만 이주민, 일반인, 8~10월)	모집완료 (추가모집 검토)	(사)한국청소년 심리상담협회 (032-328-3828)
전라남도 (제주시)	다(多)함께 만들 장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인 ■ 내용 및 일정(안) - 공방프로그램(5~10월) - 아이디어 플레이스(자조모임, 5~9월) - 문화체험 및 선진지 탐방(9월) - 전통시장 살리기 프리마켓(6~10월)	모집완료 (추가모집 검토)	사회복지법인 한림소망의집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064-796-9091)

지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주요내용	모집기간	수행단체
서울시 경기도	다문화·한부모 여 성의 경제자립 및 사회 환원사업	■ 참가대상 : 이주여성, 한부모 여성가장 ■ 내용 및 일정(안) - 방문요리셰프 전문요리과정(6~8월) - 장담그기 체험학습(7월) - 창업 교육 강연 3회, 요리연구 강연 및 실습 4회(8~10월)	모집완료 (추가모집 검토)	(사)한국여성 유권자연맹 (02-423-5355)
대전시	지역사회와 다문 화가족이 함께하 는 봉사활동 프로 젝트 “우리는 이 웃사촌”	■ 참가대상 : 다문화가족, 유학생, 한국인 중학생 ■ 내용 및 일정(안) - 봉사단 발대식(봉사자 선서, 활동다짐 나누기, 6.18) - 봉사활동 진행(6~10월) - 봉사단활동 평가회(10.20)	모집완료 (추가모집 검토)	(사)한국다문화 연구원 (042-629-6573)
서울시 (전국)	“작은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 박람회 개최”	■ 참가대상 : 결혼 예비부부·혼주, 다문화가정 ■ 내용 및 일정(안) - 다문화결혼 및 작은 결혼을 테마로 하는 박람회 개최(10월) · 다문화 작은결혼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작은결혼 모형전시, 결혼가능 공공시설 안내 · 작은결혼식 컨셉 예식 · 체험 행사(실용드레스 패션쇼, 부케만들기 체험, 포토존, 셀프웨딩 소품 만들기 체험, 손편지 쓰기, 메이크업 시연 등) · 다문화 결혼풍습 소개 및 체험	* 박람회 관람 홍보 (8.1~9.30.)	(사)한국웨딩 플래너협회 (02-547-4388)

원주시 우산동 방치된 공동주택, 공포의 타워크레인 소음과 위험에서 벗어난다

- 국토부지자체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한 MOU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원주시(시장 원창목)·LH(사장 박상우)는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6월 28일(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선도사업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발표한 방치 건축물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14.5) 이후 과천우정병원에 이어 두번째 사례이다.
-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147세대)은 ‘95년 착공 이후 공사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가 ‘09년부터 공사가 최종 중단되었으며, 방치된 타워크레인 붐대 회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노출에 주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건축주가 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로 건축 하는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LH와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번 MOU에서 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주택 도시기금 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주시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건축주의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며,

- LH는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는 나머지 선도사업 2곳(영천시, 순천시)도 채권자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첨단 과학기술로 해양수산 신산업 본격 육성한다

- 해양수산 R&D 산업화 촉진전략 수립 및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6월 29일(수) 창조형 과학기술을 통해 해양수산 산업육성을 견인하기 위한 「해양수산 R&D 산업화 촉진전략(안)」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임광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통하여 마련되었다. 이후 5월까지 대내외 의견수렴을 하고, 전문가 토론회 및 자문('16.5.9),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16.5.24) 등을 거쳐 6월 2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해양수산 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유망 분야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가 2010년 약 1.5조 달러(세계 총부가가치의 약 2.5%)에서 2030년까지 약 3조 달러로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해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The Ocean Economy in 2030('16.2, OECD)

** (미국) 통합 해양전략('13), (중국) 블루실리콘밸리 발전계획('15), (일본) 해양산업 육성 종합대책('13) 등

우리 정부도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통해 바다에서 창조경제의 답을 찾고자 그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14.9, '15.7) 및 신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14.7)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산업육성 정책과 해양과학기술 전략과의 상호연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해양수산 R&D 산업화 촉진전략(안)」은 중·장기적 투자를 요

하는 공공·인프라 성격의 해양수산 과학기술 특성상 그간 기업육성 효과가 부족했던 아쉬움을 극복하고,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과 기업성장을 위한 산업화 생태계 마련 등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10개를 육성하고, 12.3만 명을 고용 창출하여 14조원 규모의 국내외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 하에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7대 핵심산업 분야 연구개발 강화, △산업화 촉진 인프라 강화 등 3대 전략,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3대 추진전략 및 15개 중점 과제 목록 >

비 전	창조형 해양수산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육성 견인	
목 표	(단 기) '20년 시장창출 3.4조원, 고용창출 3.6만명, 글로벌 강소기업 4개 (중·장기) '25년 시장창출 14조원, 고용창출 12.3만명,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3대 추진전략 및 15개 중점과제	(전략 1) R&D 시스템 혁신	(1-1) 시장지향형 R&D 강화
		(1-2) 산업수요를 반영한 기획체계 개선
		(1-3) 親 기업형 관리체계 마련
		(1-4) 사후지원 및 성과활용 내실화
	(전략 2) 7대 핵심산업 분야 R&D 강화	(2-1) 해양청정에너지 조기 상용화
		(2-2) 국제규제 강화를 기회로 해사산업 육성
		(2-3) 수산양식·식품기술의 첨단산업화
		(2-4) 극한환경 극복을 통한 심해저 자원 확보
		(2-5)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 세계시장 개척
		(2-6) 수중건설용 첨단장비 실용화
		(2-7) 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전략 3) 산업화 촉진 인프라 강화	(3-1) 법·제도 기반 강화
		(3-2) 기술금융·펀드 활성화
		(3-3) 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3-4) 산업화 촉진체계 및 지원조직 강화

첫째,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민간 시장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업계 전용사업에 대한 투자와 사후지원을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기술 실용화가 촉진 되도록 과제기획 및 평가·관리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할 7대 핵심산업의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시장창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청정에너지’ 등 7개 핵심산업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분야별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 7대 핵심산업 분야별 추진 목표 >



셋째,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 중심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인프라도 함께 강화한다. 또한, 각 지역의 창업·투자 지원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개발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의 기업지원 기능도 꾸준히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 R&D 산업화 촉진전략(안)을 계기로 창조형 해양수산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 추진배경

- 창조형 과학기술을 통해 해양수산 산업육성을 견인하고자, 과학기술 전략과 산업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해양수산 R&D 산업화 촉진전략’을 수립·추진

II. 주요내용

Ⅰ (개요) 해양수산 R&D 3대 추진전략 및 15개 중점과제를 통한 목표달성

비 전	창조형 해양수산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육성 견인
목 표	(단 기) '20년 시장창출 3.4조원, 고용창출 3.6만명, 글로벌 강소기업 4개 (중·장기) '25년 시장창출 14조원, 고용창출 12.3만명,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R&D 시스템 혁신	7대 핵심산업 분야 R&D 강화	산업화 촉진 인프라 강화
'시장지향형 R&D 강화' 등 4개 중점과제	'해양청정에너지 조기 상용화' 등 7개 중점과제	'법·제도기반 강화' 등 4개 중점과제

Ⅱ 3대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 추진 내용

- (전략 1. R&D 시스템 혁신) 시장지향형 R&D 강화 및 기획체계 개선, 사후지원 확대 등 실용화 관점의 R&D 프로세스 혁신
 - * 자유공모 비중 및 산업계 전용사업 확대, 사업목적별 기획시스템 차별화 및 비즈니스모델 연계 기획 실시 등
 - ** 기술개발 종료 후의 사후지원 다각화 및 연구성과·정보의 실시간 통합 공유·제공을 통한 성과활용 촉진 등
- (전략 2. 7대 핵심산업 분야 R&D 강화) R&D 전략 및 시장창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7대 핵심산업 선정 및 R&D 강화
 - ① (해양청정에너지 조기 상용화) 조류·파력 등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분야 집중 투자 및 실제 전력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등
 - ② (국제규제 강화를 기회로 해사산업 육성) 핵심기술의 경쟁우위 유지·강화(선박평형수), 전략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화(e-Navigation) 등

③ (수산양식·식품기술의 첨단산업화) 수산물 생산(양식)부터 수출까지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로 국내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④ (극한환경 극복을 통한 심해저 자원 확보) 독점탐사광구 內 개발대상지역 구체화, 플랜트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 등

⑤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 세계시장 개척) 해양바이오 수소·디젤의 대량생산체계 구축 및 융합연구 확대를 통한 바이오소재 상용화

⑥ (수중 건설용 첨단장비 실용화) 로봇·센서 등 핵심기술 국산화 및 신뢰성 검증 지원을 통한 세계시장 추격 가속

⑦ (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수중통신 인프라 등 혁신기반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혁신 아이템 발굴·지원 등

○ (전략 3. 산업화 촉진 인프라 강화) 법·제도기반 강화, 기술금융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화 촉진 인프라 마련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 전문 기술평가기관 지정 및 투자여건 개선 등

③ (기대효과) 해양수산 기술의 국제선도 및 조기상용화를 통한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

○ '20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4개 육성, 고용창출 3.6만명, 국내·외 시장 3.4조원을 창출하고,

○ '25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고용창출 12.3만명, 국내·외 시장 14조원의 산업육성 효과 기대